

전주시, 서민금융복지상담소 확대키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채무자대리인제도 신설

전주시가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가정경제와 재무관리를 돕고,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빚으로 인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고통 받는 서민 등 소외계층에게 법원의 파산·면책 등 법적구제제도 신청을 위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지원되고,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협의해주기 위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신설 운영된다.

시는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지원과 채무자대리인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최소 30만원에 이르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시는 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지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명령을 받고 법원에 비용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금융복지상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복지상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인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대신 대응해 줄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채무자대리인제란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고 변호사를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중 금융복지상담소에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또는 진행예정인자로, 상담소에서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법원접수까지 걸리는 평균 3개월 동안 채무대리인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소는 학자금과 생활비 등의 소액대출에서 시작된 부채가 고공화되어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신용불량과 실업의 이중고를 겪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청년상상놀이터와 청년소통공간 '비밀'에서 사후·사전예방적 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불법사금융피해 예방 △청년·대학생 위한 창업자금 대출 및 금융 관련 상품 안내 △미래설계 재무교육 등으로, 금융복지상담소는 청년맞춤형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건전한 재무설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본



해상 익수자 구조 22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가 부안 격포항 앞 바다에서 여객선 화재로 사상 1명 사망으로 발생한 '국민참여형 대규모 민관군 합동 인명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이 화재여객선에서 탈출해 표류 중인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

연의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금융복지상담소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와 빛 담장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후원금으로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부실채권 매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복지상담소에는 소장 상담사 등 3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에 금융구제방안이나 법적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에 따른 채무조정,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일자리안내, 복지연계 등 채무자의 경

제적 지원과 회생을 위한 업무도 맡고 있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법원채무조정신청 13건(개인회생7건, 파산6건)과 복지제도 연계 15건, 일자리 안내 5건, 금융기관 채무조정 8건, 저금리 대출전환 53건 등을 처리해주는 등 총 778명에 대한 금융복지 지원 및 상담을 진행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려 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와 채권 추심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친구집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 검거

"대학 졸업 후 직업 구하지 못해 생활비 없어 범행 저질러"

전북전주지역경찰서는 22일 친구의 집의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침입해 금품을 훔친 박모씨(26,남)를 형사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김모(26)씨의 원룸에 들어가 9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원룸에 침입하기 전 대학교 동창인 김씨에게 연락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평소 김씨 집에 자주 드나들던 박씨는 미리 파악해둔 현관문 비밀번호

호를 누른 뒤 원룸에 침입했다. 박씨는 또 범행 사흘 뒤인 7일 오후 2시 40분께 덕진구에 있는 또 다른 대학 동창 이모(26)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5만원과 체크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피해자들과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3~4년간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대학 졸업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9세 여제자 상습 추행한 학습지 교사 징역

전주시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2일 9세 여자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씨(41,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공개 5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A양의 공부방에서 학습지를 알려주던 도중 48차례에 걸쳐 입맞추고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6월부터 A양의 학습지 강사로 일했던 김씨는 A양과 친밀감이 생긴 후 이 같은 일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추행을 일삼아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부안해경, 야간 음주운항 어선 적발

야간에 음주한 채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부안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지난 20일 8시30분경 부안군 가력도항에 입항하는 어선(선외기, 0.5톤)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윤모(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후 군산시 비안도에서 동료와 술을 마신 후 부안으로 나오려고 8시경 비안도 선착장에서 출

항, 가력도 선착장까지 약 5해리(약 10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이며 5톤 미만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수치다.

한편 부안 해경은 지난해에도 왕 등도 서방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1%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한 어선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한 적이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북소방본부 119구급대원 안전헬멧 전원 지급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119구급대원 전원에게 안전헬멧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최신형 안전헬멧 600여개는 노후되고 부족한 환경에서 현장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을 위해 총사업비 1억 4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일

선 구급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작했다. 신형 안전헬멧은 방수가 되는 랜턴이 장착되어 있어 야간 약전후

여가는 노후되고 부족한 환경에서 현장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을 위해 총사업비 1억 4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일

/김민근 기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시, 합동단속반 운영... 불법적 투기수요 증가 억제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뿔다방)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불법행위와 다중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근절 등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평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뿔다방'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일명 '뿔다방' 중개업자들

의 불법 영업행위도 만연해 주택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지역 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효천지구 우미 린 분양예정 시기인 오는 24일부터 관할구청, 도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2개반 1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

한 기간 중 불법전매 △뿔다방 등이 동식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다중계약서 작성 등 주택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뿔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김종열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익산경찰서, 종교시설 돌며 금품 훔친 40대 구속

신도로 위장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2일 종교시설을 돌며 금품을 훔친 김모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6분께 익산시 한 사찰의 법당에 신자로 위장하고 들어가 현금 80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충북 청주, 대전, 전주, 군산 등의 종교시설을 돌며 현금 59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종교시설 내·외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국립수목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